

지능형로봇 등 25개 산단 ‘합심’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본격 가동

산업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입주사 1921곳, 대학·연구소 등 816개 다양한 지역혁신기관 참여

지능형로봇, 첨단바이오 등 9대 산업분야 25개 산학연협의체가 출범한다. 산업단지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단을 넘어 협업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표기업을 포함한 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는 올해부터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 신사업(수소) 등 9대 산업 분야의 25개 산학연협의체로 구성된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는 기업간 네트워킹 활동, R&D 등을 지원받아, 기업 공동 비즈니스 전개, 공동 브랜드 개발, 해외 시장 개척 등 성과를 창출해왔다.

하지만 개별 산업단지별로 구성되

타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 등과는 협업하지 못하고 각 산업단지내 혁신기관·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25개 산학연협의체는 공간적 규모를 확대한 개방형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지역간·산업단지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개의 산학연협의체에 2개 이상의 다른 산업단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산학연협의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1921개사 외에도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산업디자인, 사업화전문회사 등 816개의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다.

각 산학연협의체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기적 활동 점검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협의체는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 협의체를 계속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협력파트너 탐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KICXUP비즈모아)도 올해부터 제공한다.

KICXUP비즈모아 서비스는 400여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상시 자동 수집하고, 기업 규모와 업종, 매출액, 수출 여부 등 30가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최적의 지원사업을 매칭해 주는 시스템으로, 산학연협의체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K팩토리(www.kicox.or.kr/kfactory)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 개별기업형, 공동협업형, 규제규범대응형 3대 분야에 올해만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협의체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AI) 촉진사업,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가로 기획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단지별로 산재해 있는 혁신 자원과 역량의 연계와 결집이 중요하다”며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첨단산업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무보

무보-하나은행, 수출기업 5100억 우대금융

중소·중견기업 대상... 업무협약 체결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하나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에 51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산업부가 추진한 우대금융 공급 관련 하나은행의 1차 400억원 규모 출연의 성공적 조기 공급에 이어 3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은행

의 기금 출연과 무보의 무역보험·보증 우대지원을 결합한 민간·공공부문의 협력 신상품이다.

무보는 은행 추천기업에 ▲지원한도 최대 2배 우대 ▲보증비율 95%로 상향 ▲보증·보험료 20% 할인 등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추가 출연을 통해 5100억원의 우대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수출신용보증 종목도 확대돼 1차 협약 대비 유동성 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공일자리 287.3만개... 7년새 첫 감소

통계청, 2023년 공공 일자리통계
코로나19 방역 담당인력 감소 영향
교육서비스 -1.1%, 정보통신 -5.1%

지난 2023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7년 사이 처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수를 가리킨다.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던 인력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공 일자리 수는 287만3000개로, 전년보다 0.2%(5000개)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건 지난 2016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 6.1%, 2020년 6.3% 등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 2.6%, 2022년 1.4% 등으로 둔화한 바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뉴스1

제작년 기준 공기업 일자리는 41만4000개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일반정부 일자리가 245만9000개로 전년 대비 0.2%(5000개) 감소했다.

산업분류별로, 교육서비스업에서 약 8000개(-1.1%), 정보통신업에서 약 4000개(-5.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약 1000개(-1.0%)

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청의 비공무원 일자리에서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교육부의 방역인력 지원이 점차 축소돼 오다 완전히 폐지됐는데 그 영향이 컸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0.2%에서 2023년 10.0%로 줄었다.

성별로 남성 일자리 수는 148만1000개로 전년대비 약 8000개(-0.6%) 감소한 반면, 여자 일자리 수는 139만3000개로 약 4000개(+0.3%)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남자(122만8000개)와 여자(123만1000개)가 비슷했다. 하지만 공기업 일자리의 경우 남자(25만3000개)가 여자(16만2000개)에 비해 1.6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나이 상향해야”

권익위, 청년범위 34세로 확대
복지부에 법령개정·지침 권고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취업 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입대와 대학 졸업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이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

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사실상 23세까지로 한정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나 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인 한계와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34세)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김대환 기자 kdh@

〈사내대학과 사내대학원간 비교〉

/자료=산업부

	사내대학	사내대학원
근거법	평생교육법 제32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
운영 방법	직접운영 또는 대학교 위탁운영	좌동
학위과정	전문학사 및 학사	석사 및 박사
입학자격	사업장 종사자, 협력사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협력사 종사자+채용후보자
교육비용	고용주 부담	좌동

기업내 대학원 설치... 석·박사 학위 준다

산업부 ‘첨단인재특별법’ 시행

회사 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제정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첨단인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7일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은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 인재양성 참여 지

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다.

지금까지 기업 내에서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원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현장 전문가와 첨단·고가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올해 농가소득 2.6% 늘어 5435만원 예상

농촌경제연구원, 농가인구 200만 붕괴 눈앞

올해 농가 평균소득이 55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영 여건이 개선돼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직불제가 확대되면서 이전소득도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농가인구는 200만2000명으로 추산돼 200만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6일 서울 송파구에서 ‘농업전망 2025’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관련 주요 지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KREI는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2.6% 늘어난 543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호당 농업소득은 2.7% 증가한 1312만 원,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등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3.0% 늘어난 1803만원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호당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에 이전소득, 농외소득, 비경상소득을 더한 값이다. 이전소득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익으로, 농업직불금을 포함한다. 호당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지 않은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세종=김연세 기자